

한국의 절대빈곤율 추계와 절대빈곤층의 특성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절대빈곤율을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절대빈곤율을 추계하고, 공·사 이전소득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나 빈곤으로의 진입·탈출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이루어진바 있다.¹⁾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빈곤율을 추계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빈곤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자료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빈곤율을 추계하고 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특성과 장단점, 자료의 이용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서로 다른 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빈곤 관련 연구들을 참고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자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제1절 절대빈곤율의 의미

절대빈곤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절대빈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평균적인 소득, 혹은 소비의 일정 수준으로 상

1) 본 연구의 목적은 상대빈곤이 아니라 절대빈곤율 추계 및 절대빈곤층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집중되기 때문에 이하에서 빈곤율, 빈곤층, 빈곤가구라는 용어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절대빈곤율, 절대빈곤층, 절대빈곤가구를 의미한다.

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있다. 이 때 평균의 기준으로서는 중위값을 주로 사용하며,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국제비교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주관적 빈곤개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공부조 수급자를 선정,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빈곤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절대빈곤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준이 되는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최저한도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망라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전물량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반물량방식(Oshansky's poverty scale)에 의해 설정된 빈곤선을 매년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으로 삼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재 사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999년도에 계측된 것이다.³⁾ 그 이전에는 1994년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있고,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999년부터 5년째가 되는 올해에 새로운 최저생계비 산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최저생계비를 실제로 계측하는 않는 중간 기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생계비를 조정하는데, 대체로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해 계측되는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최저생계비, 혹은 표준생계비를 계측하여 임금요구안 작성에 활용해 왔으나 점차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단

2) 미국에서 현재 사용되는 빈곤선은 1960년대 초반에 Orshansky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그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uggles, 1990).

3) 현재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김미곤 외(1999) 참조.

신근로자 최저생계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어 왔으나, 최근 최저임금결정에서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중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⁴⁾

제2절 절대빈곤을 추계와 관련된 논점들

절대빈곤율의 개념은 비교적 명료하지만, 실제로 절대빈곤율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중요한 논점에 대한 판단 및 기술적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본다.

1. 빈곤율 추계의 기준

우선 첫 번째는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빈곤선과 비교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 가운데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이다(Atkinson, 1998; Ruggles, 1990). 빈곤이 재화와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빈곤선을 설정하는 목적의 하나가 빈곤계층 보호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정책적 차원에 있기 때문에 손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의 경우 빈곤층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기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소비의 경우 소득에 의해 좌우되고, 빈곤층의 경우 이론적으로 소비가 소득보다 커서 실질적인 재정적 능력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물론 항상소비를 이용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없으나 항상소비는 실제 소비보다 더 측정이 어려워 연구목적 이상으로 실제 공공부조 운영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렵다.⁵⁾

4) 사회경제적 변화 및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비계측년도의 조정방식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물량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보다는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 및 보호의 기준을 상대빈곤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주제는 별도의 심층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5) 국내에서 항상소비를 이용하여 빈곤 문제에 접근한 연구로는 김대일(2004)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선정, 보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추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재산이라는 스톡(stock)으로부터 소득이라는 플로우(flow)가 발생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기 이전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행정적으로 매우 번거롭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도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추정소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⁶⁾

한국에서 지금까지 절대빈곤율을 추계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박능후(2004)에서 제시한 기존 연구들을 약간 수정한 것이 다음 <표 2-1>이다.

<표 2-1>에서 황덕순(200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을 추계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료 및 추계방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빈곤율을 얻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더 깊이 들어가면 소득 가운데서도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서 각 연구들을 어떠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⁷⁾

<표 2-2>는 각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 기준을 보여준다.⁸⁾ 표 주에는

6)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기준의 타당성은 또 다른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7)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박능후(2004)에서 시도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연구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서 논점들을 더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제기하지 않은 다른 논점들을 포괄하고, 실제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빈곤율을 추계하고, 나아가 빈곤층의 주요 특성까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 박능후(2004)에도 유사한 표가 있으나 <표 2-2>는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고려하여 더 구체화한 것이다.

각 소득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정의해 놓았다.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서 소득을 정의하는 용어도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다양한 소득기준을 사용해서 분석한 박찬용(2002)의 정의를 따랐으나, 각 연구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표 2-1〉 절대빈곤율 추계 현황

연구자	계측연도	사용자료	분석 단위	비교 대상	빈곤선	빈곤율(%)
석재은외 (2002)	1996-2002 매분기	도시가계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6.37 (2000 1분기) 4.44(2001)
홍경준 (2002)	2001	도시가계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5.2
박찬용외 (2002)	1996	가구소비 실태조사	개인	소득	최저생계비	3.16
	2000		개인	소득	최저생계비	9.42
구인회 (2002)	1998	한국노동 패널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21.1
	1999	(KLIPS)	개인	소득	최저생계비	19.4(19.1)
유경준 (2002)	1996	가구소비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17.1
	2000	실태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5.91
황덕순 (2002)	1998~ 2000 매분기	도시가계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7.4 (2000 1/4분기)
				소비1	최저생계비	2.6 (2000 1/4분기)
				소비2	최저생계비 (주거비 제외)	10.2 (2000 1/4분기)

자료 : 박능후(2004)에서 재인용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빈곤율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연구의 목적이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경준(2002)과 박찬용(2002) 외의 경우 공·사 이전소득이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선정하여 빈곤율을 추계한 것이다.

〈표 2-2〉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소득기준

연구	소득기준	연구목적
홍경준(2002)	1차 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공·사 이전소득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
박찬용외(2002)	1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이전소득 및 사회보장제도와 조세가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
구인회(2002)	총소득	빈곤으로의 진입·탈출 분석
유경준(2004)	가처분소득(단, 2000년도에 대해서는 경상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이용)	절대빈곤율 추계
황덕순(2001)	경상소득	분기별 절대빈곤율 추이

주 : 총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업소득 + 재산소득 + 공·사이전소득

시장소득 = 경상소득 - 공적이전소득

1차소득 = 경상소득 - 공·사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사회보장부담금 - 조세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떠한 소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비교 대상이 되는 최저생계비 수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상소득이나 총소득이 아니라, 공적이전 및 조세까지도 고려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생계비에 조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박찬용(2002)의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조정했는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전후 맥락을 볼 때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경준(2004)의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표 2-1>에서 본 것처럼 지출이나 소비를 이용하여 빈곤율을 추계한 경우는 황덕순(2001)의 예를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 그 연구에서 소득이 아니라 소비를 이용한 이유는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실제지출이나 소비를 이용하여

빈곤율을 추계할 경우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비교대상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소비와 비교할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가계조사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할 경우 조사되는 주거비 비목에 자가평가액이나 전세평가액, 보증부월세 평가액을 합산해서 사용해야 한다. 김대일(2004)의 경우 항상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빈곤율을 추계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항상소비와의 비교대상으로 최저생계비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추계의 기준기간이다. 황덕순(200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분기별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도시가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기별로 소비, 혹은 지출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을 구해보면, 광열수도비와 같이 계절성을 갖는 소비항목 때문에 분기별로 빈곤율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간단위로 추계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을 추계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시점에는 빈곤하지만 연간으로는 빈곤하지 않은 가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황덕순(2001)에 의하면 소득기준으로 하더라도 분기별 빈곤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Ruggles(1990)는 미국에서 연평균소득으로 구한 빈곤율과 12개월 내내 빈곤한 가구의 비율, 한 달이라도 빈곤한 가구의 비율, 매월의 빈곤율의 연간 평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매월 빈곤율의 연간 평균도 연평균소득으로 구한 빈곤율보다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2~4% 포인트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패널조사 및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연간단위로 조사되지만, 도시가계조사는 월단위로 조사되고, 분기단위로 집계되어 발표된다는 점에서, 이 조사를 이용할 경우에 연간단위에서 빈곤율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불안정취업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빈곤율 추계에서 추계의 기준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⁹⁾

9) 2002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간자료를 1년간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

추계의 기준 기간이 중요한 또 한가지 이유는 위와 같은 학술적인 차원의 관심뿐만 아니라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가 연간 단위의 소득이 아니라 월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보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의 논점과는 정 반대의 측면에서 연간 단위를 넘어서는 빈곤의 지속성 및 장기간 빈곤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패널의 조사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서, 연간 단위의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금재호·김승택, 2001; 구인회, 2002).

또 다른 주제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소비를 이용한 소득의 추계 문제가 있다.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이 발표되고, 비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비만이 발표되기 때문에 소비로부터 소득을 역으로 구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박찬용 외(1999, 2002)이다.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해당 연구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소비함수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고, 해당 연구에서 가정한 것처럼 소득과 소비가 선형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소득을 이용한 빈곤율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2.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에 따라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선형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개인별 재화와 서비스 필요액)×가구원수에 의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간에 공유하는 소비품목 때문에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필요액이 선형적

로 상용직의 1.0%, 임시직의 3.2%, 일용직의 10.9%가 매월 취업에서 실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용직, 특히 일용직의 경우 실업보다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규모를 적절히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나 소득, 혹은 소비(지출)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에 사용되는 기준이 가구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이다.

절대빈곤율을 추계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모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서 얻어진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이용한다.¹⁰⁾

국제비교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규모별 소비지출의 차이를 반영하는 일정한 파라미터값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방식, 즉 N^{α} ($0 \leq \alpha \leq 1$, N 은 가구원수)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α 값으로 1/2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¹¹⁾ 황덕순(2001)에서는 이 균등화지수를 이용한 결과와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얻어진 가구 균등화지수를 이용한 빈곤율 추계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소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부표 2-2>에서도 다른 자료를 이용했을 때 두 균등화지수에 따른 빈곤율을 소개하고 있다.¹²⁾

한편 OECD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 내에서 첫 번째 성인은 1, 다른 성인은 0.7,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0.5를 부여하는 방식이다(Atkinson, 1998).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이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10)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연구결과에서는 6인 가구까지의 최저생계비만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연구진의 협조를 통해 7인 이상 가구의 생계비 자료를 구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에서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의 적정성을 문제삼지 않는 한 절대빈곤율 추계에서 이 균등화지수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빈곤율 추계를 할 때 가구균등화지수로 이 균등화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균등화지수가 공공부조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빈곤계층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11) OECD 4개국의 빈곤의 동학에 대해 분석한 Antolin et al.(1999)의 경우에도 $N^{0.5}$ 을 균등화지수로 사용하였다.

12) 이외의 다양한 기관이나 연구에서 사용한 균등화지수에 대해서는 Ruggles(1990)의 p. 74 참조

3. 자료의 특성

실제로 빈곤율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추계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소비, 혹은 지출, 가구규모, 나아가 세분화된 비목별 지출액 등이 조사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빈곤율 추계에 사용되어 온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도시가계조사와 전국가구소비실태조사가 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도 빈곤에 관한 분석에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이 자료들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도시가계조사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에 국한되어 조사될 뿐만 아니라 2인 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본은 매월 조사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하위표본으로서 매월 5,000가구 내외이며, 분기별로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런데,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가구주가 근로자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을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근로자 가구 이외의 다른 가구에 대해서는 세부소비항목 지출만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조사는 표본가구로 하여금 가계부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시가계조사는 월단위로 자료가 입력되고, 분기 및 연도별로 보고서가 발표된다. 따라서 완전한 데이터를 이용하면 월단위의 분석 및 이를 연결한 패널자료를 구축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분기별로만 자료가 발표되고, 제공되고 있다. 이를 이용해서도 패널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기단위에서 동태적인 빈곤으로의 진입, 탈출 및 빈곤기간 분석이 가능하다(황덕순, 2001; 이병희, 2001). 그렇지만 패널화할 경우에 연결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도시가계조사는 2003년도부터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 통합하여 ‘가계조사’로 이름을 바꾸고 조사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표본의 크기가 7,500가구로 커지고 조사대상도 도시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단독가구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

루어지며, 농어를 제외한 일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¹³⁾ 또 한가지 중요한 변화로 근로자 가구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을 조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대외적으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할 때에는 표본수가 커지고,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이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¹⁴⁾

나. 가구소비실태조사

전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신가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높다. 표본수는 1996년 48,580가구, 2000년 23,720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를 제외한 자료를 분석한다. 2000년에는 농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에도 가구주의 산업이 농림어업인 가구가 1996년도에 386가구, 2000년에 187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시가계조사와 달리 자영자, 근로자, 무직 등 모든 가구의 소득을 조사, 공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어를 제외하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조사가 갖는 장점을 활용해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추정하고, 이 관계를 이용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의 도시가계조사의 자영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할 때에도 몇 가지 세부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다.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주거비와 광열수도비가 통합되어 조사되었다. 따라서 광열수도비와 주거비 비목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다.

한편 본 조사에서 사용한 2000년도 자료의 경우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1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의 통계조사에 대한 소개 참조

14)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 자료에 대해서도 편의상 도시가계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세부항목의 합과 자료에서 제공한 경상소득액을 비교한 결과 81.3%는 일치하나 18.3%는 세부항목을 합산한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부업소득을 제외한 각 세부 소득항목에 부업소득이 이미 합산되어, 경상소득에 반영되어 있으나, 별도로 부업소득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6년도에는 연간소득을 이용하였으나, 2000년에는 특정월의 소득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자료에서 제시되는 변수들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할 것이다.¹⁵⁾

다.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이하 ‘패널조사’)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패널자료로서 빈곤분석에도 활용되어 왔다. 패널조사는 1998년도에 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04년 현재 7차년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2002년도에 조사된 5차년도까지의 자료로서 실제 조사대상연도는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이다. 첫년도의 표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표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패널조사의 소득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는 각 년도마다 소득자료를 구성하기 어려운 관측치들이 있다는 점이다. 패널조사의 연도별 표본수 및 소득자료를 구성하기 어려운 표본수는 <표 2-3>과 같다.

두 번째는 조사시점과 소득조사의 기준시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1998년도는 소득 및 지출에 대해서 설문시점부터 지난 1년으로 조사한 반면, 1999년도 이후부터는 조사시점 전년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따라서 1998년도 자료와 이후의 자료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조사의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15)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확인 결과를 거쳐서 자료에서 제공되는 경상소득액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표 2-3〉 한국노동패널조사 관측치수와 소득조사가 불충분한 관측치수 추이

	1차(1998)	2차(1999)	3차(2000)	4차(2001)	5차(2002)
전체표본(가구)	5,000	4,509	4,267	4,248	4,298
결측수	137	52	27	46	1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두 번째는 소득이 다른 조사에 비해 현저히 낮게 조사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00년도를 대상으로 한 2001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한 구인회(2002)의 경우 KLIPS의 소득수준을 일률적으로 20% 상향조정해서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패널조사의 소득을 이용한 빈곤율의 추이를 구해보면, 2002년도 조사(조사기준시점, 2001년도)에서는 도시가계조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빈곤율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건 소득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을 전후한 자료를 연결해서 분석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상대빈곤율의 경우에는 문제가 덜할 수 있지만, 절대빈곤율의 경우에 더욱 신중하게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패널조사를 이용해서 소비지출을 분석할 경우에도 조사시점마다 조사방식이 다르고, 다른 조사와 주거비 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1차년도와 3차년도 조사에서는 월평균생활비만 조사하고 있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경우에도 주거비 항목에 월세, 주택관리비, 냉난방비 등이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냉난방비는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광열수도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가계조사와 비목별 지출을 비교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의 지출 항목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패널조사의 각년도의 소비지출 비목은 다음 <표 2-4>와 같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패널조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패널조사로서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장점을 살린 연구로는 구인회(2002)와 금재호·김승택(2000) 등이 있다.

〈표 2-4〉 한국노동패널조사 소비지출 비목 추이

	2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소 비 지 출 세 부 항 목	식비	식비	식비
	외식비	외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주거비	주거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문화비	문화비
	내구재	내구재	내구재
	-	통신비	통신비
	-	-	용돈
	기타생활용품비	기타생활용품비	기타

주 : 1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월평균 생활비만 조사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또한 가구주 이외에 가구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조사된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 가지 자료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가구주 및 가구원의 고용 상태 등 여러 가지 관련 변수들이 조사시점과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 조사되는 반면, 가구의 소득은 조사시점의 전년도에 대해서 조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구원의 특성과 가구소득을 연결해서 분석할 경우에는 2개년도의 자료를 동시에 사용해서 분석해야 한다.¹⁶⁾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본 연구의 제6절에서는 근로능력자 및 근로여건을 기준으로 빈곤층 유형 구분을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6) 위의 자료 이외에 빈곤에 관해 분석할 수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 실태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과 다른 자료와의 비교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제3절 절대빈곤율 추계

1.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 추계

여기에서는 도시가계조사(1996~2003),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패널조사(1997~2001)의 경상소득과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해서 구한 빈곤율을 우선 살펴본다.¹⁷⁾ 도시가계조사(근로자가구)의 빈곤율과 패널조사(전체가구 및 근로자가구 기준)의 빈곤율은 [그림 2-1]과 같다. 여기의 빈곤율은 인구기준으로 추정된 것으로 가구기준 빈곤율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기준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는 <부표 2-3>에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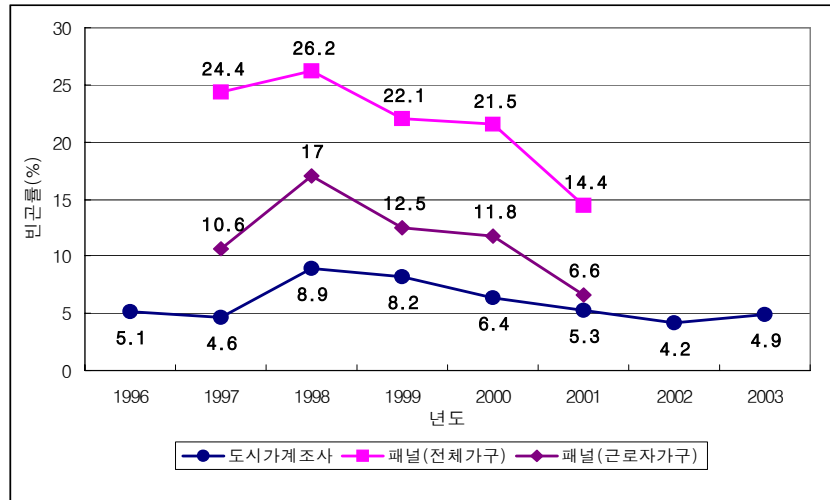
[그림 2-1]에서 우선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 가구 빈곤율은 경제위기 전에 5%를 전후한 수준이었다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8.9%(1998년)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2년에는 4.2%까지 낮아졌지만, 2003년도에는 다시 4.9%로 상승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체감하는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⁸⁾

패널조사 빈곤율의 경우 전체가구와 근로자가구로 나누어서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 가구를 보면 1997년 하반기~1998년 상반기(1차년도, 1998년 조사)에 이미 24.4%로 매우 높고, 1998년도에는 26.2%로 정점에 이른다. 이후 점차 감소하지만, 2001년 14.4%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7) 최저생계비가 1999년도에 계측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최저생계비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18) 연간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연간 조사된 모든 관측치를 조사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분석하였다.

[그림 2-1]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 추이(1996~2003년)



주 : 패널조사 1997년도는 1997년 하반기에서 1998년 상반기 기준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및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도시가계조사와 기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조사기준 시점에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를 추출하여 분석해 보면 전체 가구보다는 빈곤율이 낮지만 시기별 빈곤율의 추이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도시가계조사에 비해 1997~2000년도까지는 빈곤율이 매우 높다가 2001년부터는 6.6%로서 도시가계조사(5.3%)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점이다.¹⁹⁾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패널조사를 이용한 빈곤 분석은 이러한 자료상의 특징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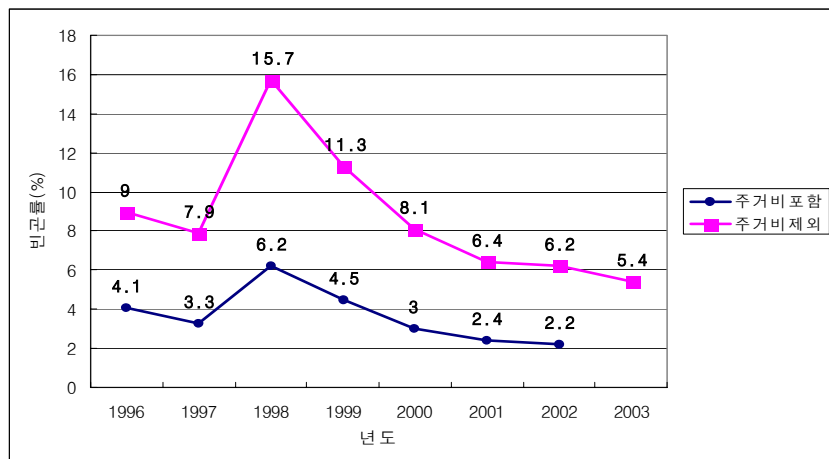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1996년도에 3.7%, 2000년도에 7.9%이며, 근로자 가구 기준으로는 1996년에 2.4%, 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3.9%로서 다른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19) 도시가계조사에 더 근접하도록 패널조사에서 2인 이상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빈곤율을 추계한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율과 차이가 없거나 연도별로 0.1~0.2%포인트의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2.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

다음으로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에 대해서 살펴보자.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과 다음에 살펴보는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지출기준 빈곤율은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²⁰⁾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은 최저생계비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값과 비교해서 구해진다. 빈곤율의 추계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 추이(1996~2003년)



주 : 2003년에는 자가평가액 및 전세평가액을 구할 수 없어서 주거비를 제외한 빈곤율만 산출 가능함.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은 월세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의 정상적인 소비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주거비 제외 빈곤율과 주거비까지 포함한 빈곤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2-2]에서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주거비를 제외한 빈곤율과 주

20) 패널조사의 경우 모든 년도에 대해 지출 비목이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았고, 가구소비실태조사도 2000년도에 주거비가 광열수도비와 통합되었기 때문에 추이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거비를 포함한 빈곤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은 [그림 2-1]에서 살펴본 소득기준 빈곤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는 빈곤가구가 평균적으로 자신의 소득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모든 조사년도(7년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빈곤가구가 계속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가구는 파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은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황덕순(2001)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진입과 탈출은 대부분 빈곤선의 바로 아랫 계층과 바로 윗 계층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깊이 연구된 바 없는 주제로서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주거비를 제외한 빈곤율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왜 주거비 제외 빈곤율이 주거비를 포함한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는가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산술적인 이유는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주거비 수준보다 실제 빈곤가구로 분류된 가구의 주거비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하게 한다. 첫 번째는 현재 설계되어 있는 최저생계비에 주거비가 과소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는 모델가구를 대상으로 설정된 최저주거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그런데, 위의 결과는 이 주거기준이 실제 빈곤가구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빈곤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더 큰 소비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두 번째 논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찾아질 수 있다.

한 가지 방식은 최저생계비의 주거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주거와 다른 소비지출 사이의 특성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어떠한 방식이 타당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만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현재 설정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105만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주거비를 현실화할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이 일반국민의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제5절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기준 빈곤 가구의 주거비는 49만원을 넘어선다.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에 이를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최저생계비에 이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계급여가 이를 반영하여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실제 급여수준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더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가구의 실태를 반영한 보호방식으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분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비 제외 빈곤율이 전체 소비기준 빈곤율과 다른 또 한가지 특징은 변동폭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주거비가 다른 비목에 비해서 소득탄력성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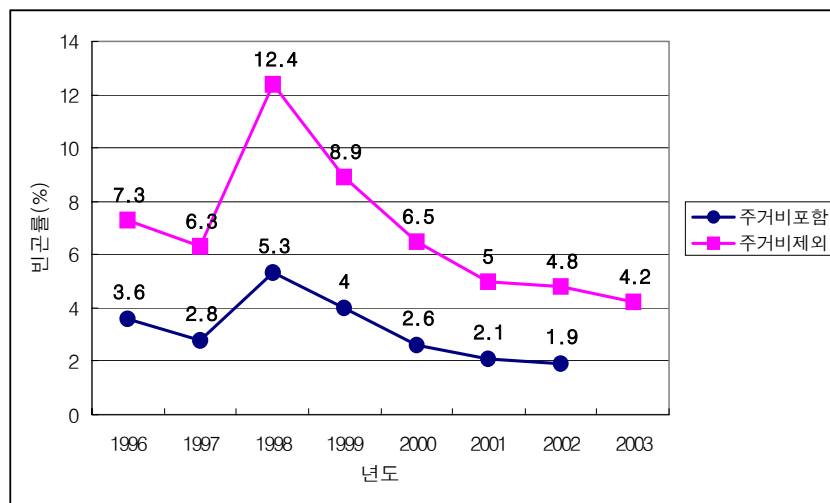
3. 총지출 기준 빈곤율

총지출 기준 빈곤율은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비소비지출까지 고려해서 추계한다. 도시가계조사에서 비소비지출에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부담금,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송금을 비롯한 이전지출이 포함된다. 지출 기준 빈곤율의 추계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비소비지출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림 2-2]와 [그림 2-3]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다만, 총지출 기준 빈곤율이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보다는 더 낮게 나타난다.

[그림 2-3]에서 총지출 기준 빈곤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소비지출에서 살펴본 것처럼 빈곤가구의 비소비지출이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대적 비중이 적게 나타날 뿐이다. 그 반대로 최저생계비에는 비소비지출이 포함되어 있지만, 총지

출 기준 빈곤율보다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비소비지출도 실제 빈곤가구의 실태보다 최저생계비에 더 적게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4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그림 2-3) 총지출기준 빈곤율 추이(1996~2003년)



주 : 2003년은 주거비를 제외한 빈곤율만 산출 가능함.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제4절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

제4절에서는 국가의 개입 이전의 빈곤율과 국가가 개입한 이후의 빈곤율에 대해서 살펴본다. 국가의 개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어떤 기준이 적정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2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의 최저생계비와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의 소득 및 국가가 개입한 이후의 소득과 비교한다.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의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에서 비소비지출항목을 제외한 값이다. 최저생계비에서 비소비지출이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으로만 구

성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의 소득은 ‘경상소득 - 공적이전소득 = 시장소득’으로, 국가가 개입한 이후의 소득은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 경상소득 -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 가처분소득’으로 측정된다.

<표 2-5>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추계한 국가개입 전후의 빈곤율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 가구의 경우 국가개입후에 국가개입전에 비해 빈곤율이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구유형별로 이 효과를 구분해 보면 상당히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 가구와 자영자 가구의 경우 국가개입후에 오히려 빈곤율이 더 높아졌으며, 무직자 가구(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의 경우에만 빈곤율이 낮아진다.

<표 2-5> 국가개입 전후의 빈곤율 비교(2000년)

(단위 : %)

가구주 구분	전체	근로자	자영자	무직자
국가개입 전 빈곤율(1)	9.0	4.3	5.2	37.2
국가개입 후 빈곤율(2)	8.9	4.8	6.2	31.8

주 : 1) 시장소득 = 경상소득 - 공적이전소득' 기준 빈곤율

2)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기준 빈곤율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원자료..

위의 결과는 이전소득이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홍경준, 2002)나 국가 개입 전후의 빈곤율을 분석한 박찬용외(2002)와는 다른 것이다. 우선 홍경준의 경우에는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는 상충되지 않는다.

박찬용외(2002)의 경우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효과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상충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와 비교대상이 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2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최저생계비에 이미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소득과 공시된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비교했기 때

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무직자 가구의 경우에는 국가개입이 기대한 대로 빈곤율을 낮추지만 (빈곤율 감소효과 14.5%), 근로자와 자영자 가구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선 산술적인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보다 실제 빈곤층이 부담하는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이 더 높기 때문이다. 1999년도에 계측한 최저생계비에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은 19,720원이나 2000년도 도시가계조사에서 빈곤가구가 실제 부담한 평균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은 50,430원에 이른다. 반면, 공적이전이 이보다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구와 빈곤가구의 국가개입 후의 빈곤율이 국가개입 이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산술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제도적인 이유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이 1998년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은 2008년으로, 이 시점이 지나면 공적 이전의 효과가 급격히 증가해서 국가개입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직가구와 전체 가구 차원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크겠지만, 근로자 가구와 자영자 가구는 연금수급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더라도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가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5절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제5절에서는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을 비교한다. 자료는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한다.²¹⁾ <표 2-6>에는 근로자 가구를 대

21)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03년도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주거비를 별도로 구할 수 없고, 2000년도에도 주거비를 별도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상으로 경상소득 기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을 비교한 결과, <표 2-7>에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지출 기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총 소비지출액부터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빈곤가구의 총 소비지출액은 157만 2천원으로 일반가구의 259만 5천원에 비해 60.6%이다. 제3절의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경상소득 기준 빈곤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가 49만 2천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주거비가 매월의 실제 지출이 아니라 자가 및 전세, 월세보증금 평가액에 실제 주거 관련 지출을 합산해서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논점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표 2-6> 경상소득 기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 비중, 지출액 상대비

(단위 : 천원, %)

구 분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합계
빈곤	지출액(A)	343	492	79	33	53	75	110	41	167	180	1,572
	비중	24.4	31.9	5.8	1.8	3.2	4.0	6.3	2.2	10.6	9.8	100.0
일반	지출액(B)	517	703	94	81	112	84	192	96	340	376	2,595
	비중	22.1	28.2	4.2	2.5	4.2	3.0	7.0	3.2	12.2	13.4	100.0
(A/B)×100		66.3	70.0	84.2	40.5	47.3	88.7	57.1	42.2	49.2	48.0	60.6

주 : 비중은 원단위까지 고려하여 산출함.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2년 원자료.

다음으로 세부 비목별 지출을 살펴보자. 빈곤가구에서 가장 지출비중이 높은 것은 주거비로서 31.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식료품비(24.4%), 교통통신비(10.6%), 기타 소비(9.8%), 교육비(6.3%)의 순서로 나타난다. 비목별 지출비중의 순서는 기타소비를 제외하면 일반가구도 큰 차이가 없는데 주거비(28.2%), 식료품비(22.1%), 기타소비(13.4%),

교통통신비(12.2%), 교육비(7.0%)의 순이다.

비목별 지출비중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의 차이이다. <표 2-6> 마지막 줄의 빈곤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이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상대비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상대비가 가장 높은 것은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서 보건의료비(88.7%), 광열수도비(84.2%), 주거비(70.0%), 식료품비(66.3%)의 순서로 나타난다. 비목별 지출액의 상대비가 가장 낮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교양오락비로서 월 평균 지출액이 3만 5천원에 불과하다.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다면, 단기적으로 빈곤가구의 생계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의 우선순위를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와 주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보호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평균 교육비는 빈곤가구가 11만원으로 일반가구의 19만 2천원의 57.1%에 불과하다. 이는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교육투자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빈곤의 세대간 재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황덕순(2001b)에 의하면 윗세대의 직업과 다음 세대의 직업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교육수준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세대간 빈곤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소비지출 기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자. <표 2-7>에 의하면 소비지출 기준 빈곤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총액은 73만 6천원으로 일반가구의 28.5%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주거비까지를 고려한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별했기 때문에 소비지출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나타난다.

〈표 2-7〉 소비지출 기준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출 비중, 지출액 상대비

(단위 : 천원, %)

구 분		식료 품	주거 비	광열 수도	가구 집기	피복/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소비	합계
빈 곤	지출액 (A)	230	206	52	11	20	20	30	13	89	66	736
	비중	31.6	27.8	7.1	1.6	2.7	2.8	4.0	1.8	11.9	8.7	100.0
일 반	지출액 (B)	514	702	94	80	112	85	192	95	337	373	2,583
	비중	22.0	28.3	4.2	2.5	4.1	3.1	7.0	3.2	12.2	13.4	100.0
(A/B)*100		44.7	29.3	55.5	14.2	18.2	24.1	15.5	13.5	26.3	17.6	28.5

주 : 비중은 원단위까지 고려하여 산출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2년 원자료.

<표 2-6>과 <표 2-7>을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소비지출 기준 빈곤가구의 비목별 지출 비중 및 지출 수준이 경상소득 기준 빈곤가구의 비목별 지출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선 비목별 지출 비중을 보면 식료품비가 주거비보다 더 커져서 식료품비(31.6%), 주거비(27.8%)로서 둘을 합한 비중이 59.4%에 이른다. 다음순서는 교통통신(11.9%), 기타소비(8.7%), 광열수도비(7.1%)로서 순서에 큰 변화가 없다.

주목되는 것은 교육비와 보건의료비의 절대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빈곤가구의 경우 가구규모가 적고, 교육비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 기준 빈곤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으로서 일반가구의 3.4명보다 더 크고, 보건의료비 지출은 낮다는 점에서 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소비지출 기준 빈곤가구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기 때문에 교육급여와 의료급여의 수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이들 가구의 교육비와 의료비지출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제6절 빈곤가구의 특성

제6절에서는 빈곤가구의 일반가구의 주요한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빈곤가구가 주로 어떤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빈곤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가장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고용 관련 특성은 도시가계조사와 패널조사를 이용해서 살펴본다.

1. 가구특성별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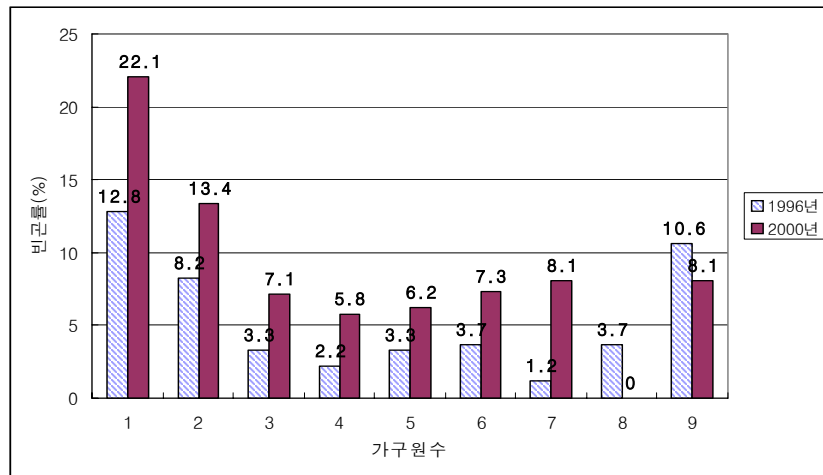
[그림 2-4]에는 경상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빈곤율이 제시되어 있다. 가구원수별 빈곤율은 조사시점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U자형의 모양을 보인다. 두 시기 모두 4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고, 이로부터 가구규모가 작아지거나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가구규모가 작아질 때는 이러한 경향이 확실히 나타나지만, 가구규모가 커질 때는 약간의 기복이 있는 차이가 있다. 가장 빈곤율이 높은 것은 단인가구로서 1996년에는 12.8%, 2000년에는 무려 22.1%의 빈곤율을 보인다. 2인가구의 경우에도 2000년의 빈곤율은 13.4%로서 다른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가구규모가 가장 큰 9인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에 10.6%, 2000년에는 8.1%이다. 따라서 <부표 2-4>에서 살펴본 것처럼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평균가구원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가구규모별로 빈곤율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정책이나 제도의 설계과정에서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 언급할 것은 가구균등화지수가 가구규모별 빈곤율의 추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위의 결과는 특히 주목되는데, <부표 2-1>에 제시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구원수의 제공근으로 산출된 가구균등화지수에 비해 최저생계비의 가구균등화지

수를 이용할 경우 4인가구에 비해 규모가 작은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낮고, 큰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림 2-4] 가구원수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1996,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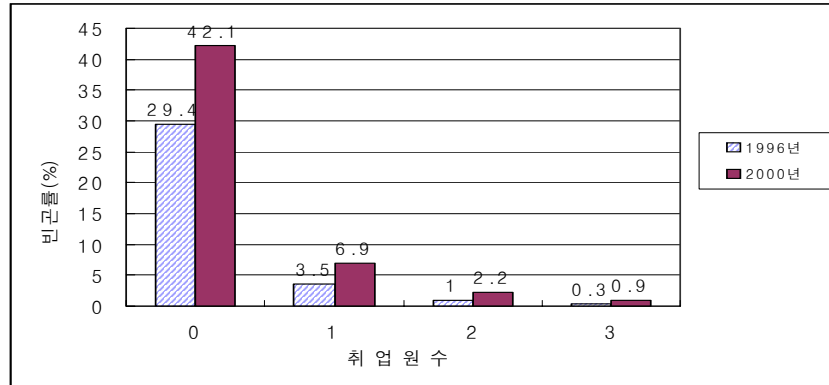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2-5]에는 가구의 취업인원수별 빈곤율을 보여준다. 취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빈곤율이 매우 높고, 취업인원수가 늘어나면서 빈곤율이 급격히 낮아져서 4인 이상이 되면 빈곤율은 0이 된다. 가구내에 취업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빈곤율이 매우 높아서 1996년도에는 29.4%, 2000년도에는 무려 42.1%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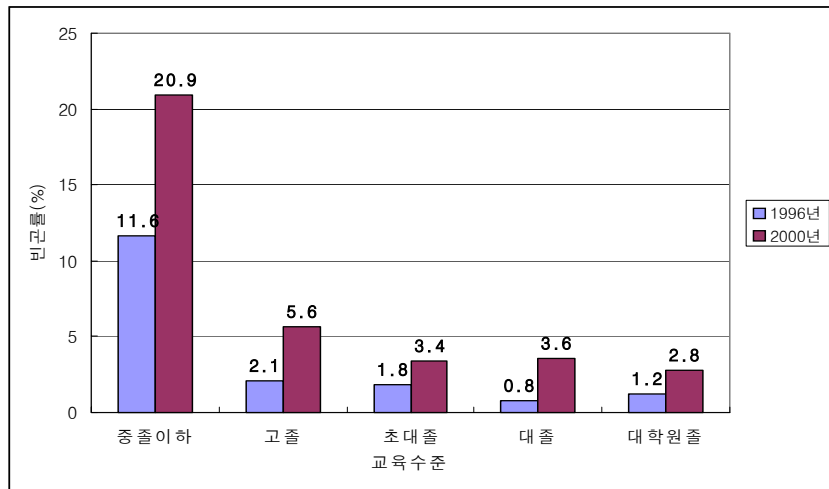
[그림 2-6]은 가구주 교육수준별 빈곤율을 보여준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은 낮아지는데, 초대졸과 대졸, 대학원 졸 사이에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1996년도에는 대졸, 대학원졸, 초대졸의 순서로 빈곤율이 낮았지만, 2000년도에는 대학원졸, 초대졸, 대졸의 순서로 빈곤율이 낮다. 특히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로서 1996년도에 11.6%, 2000년도에 20.9%이다.

[그림 2-5] 취업인원수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1996, 2000년)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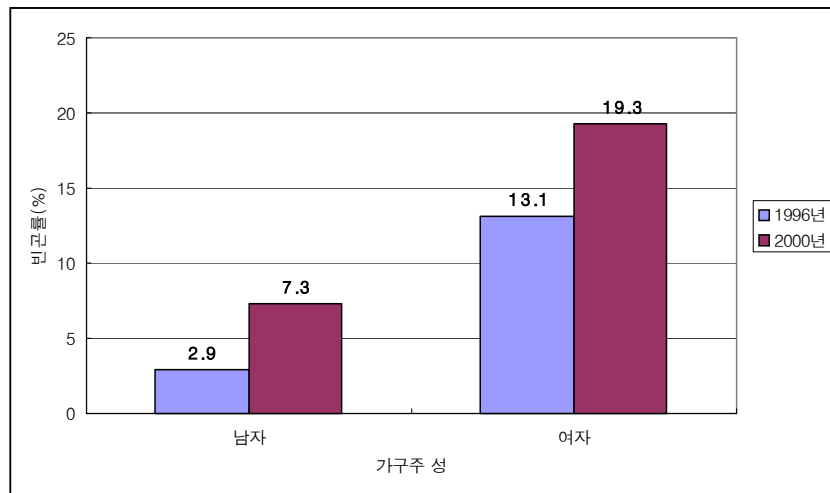
[그림 2-6] 가구주 교육수준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1996, 2000년)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그림 2-7]은 가구주 성별 빈곤율을 보여준다.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에 비해서 여자인 경우 빈곤율이 매우 높아서 1996년에는 여자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3.1%로서 남자가구주 가구 빈곤율 2.9%의 4배를 넘는다. 절대적인 빈곤율 수준은 2000년도에 훨씬 높아서 남자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7.3%, 여자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3%에 이른다.

[그림 2-7] 가구주 성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1996, 2000년)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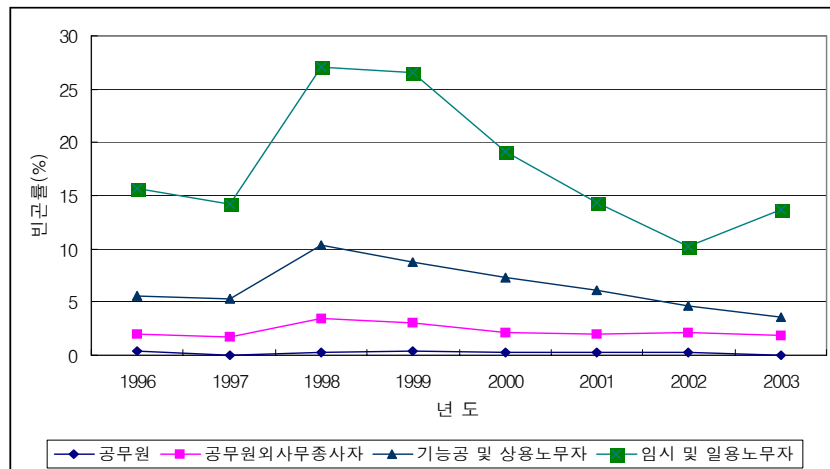
2. 고용상태별 빈곤율

우선 가구주의 고용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빈곤가구의 특성을 살펴 보자. [그림 2-8]은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주 고용형태별 빈곤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2-8]에 의하면 고용형태별로 빈곤율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빈곤율의 절대수준은 공무원,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순서로 높아지는데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경우는 다른 집단보다 빈곤율이 현저히 높다. 특히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1998년도와 1999년도에는 빈곤율이 25%를 상회하였다. 그림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이고, 실직시에는 빈곤율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빈곤은 위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2003년도에 빈곤율이 다시 크게 높아져서, 빈곤율이 모두 낮아지는 다른 집단과 대조를 보인다. 도시가계조사에서 2003년도에 근로자가구의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전적으로 이 집단의 빈곤율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서 고용형

태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과 같은 근로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림 2-8] 근로자가구 고용상태별 빈곤율 추이(경상소득 기준, 1996~2003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근로자 가구 이외에는 소득이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취업형태별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8>과 같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자영자 내부에서도 취업형태별로 빈곤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가구를 먼저 살펴보면 절대수준은 낮지만, 앞에서 살펴본 고용형태별 빈곤율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자영자 내부의 취업형태별 빈곤율의 차이는 2000년도보다 1998년도에 두드러지는데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주보다 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의 빈곤율이 훨씬 높고, 피고용자가 있는 자유업자보다, 피고용자가 없는 자유업자의 빈곤율이 더 높다.²²⁾ 전체 자영자 가운데 가장 빈곤율

22) 자유업자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조산원, 도안사, 화가, 저술가, 작곡가, 음악평론가, 컨설턴트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는 독립자영자를 의미한다. 자영업주와 자유업자 가운데 피고용자가 있는 경우는 피고용자가 1~

이 높은 집단은 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로서 1998년도에는 빈곤율이 5.6%, 2002년도에는 2.0%이다. 이들의 빈곤율은 1998년도에는 공무원의 사무종사자보다 높았고, 2002년도에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보다 낮아서, 영세자영자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무직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데, 1998년에는 12.7%, 2002년도에는 6.0%이다. 다만, 1998년도에는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빈곤율이 12.9%로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과 비교해 보면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에서는 무직가구와 임시 및 일용직 가구사이의 빈곤율 격차가 거의 없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2-8〉 소비지출 기준 취업형태별 빈곤율(1998, 2002년)

(단위 : %)

	1998	2002
공무원	0.9	0.2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2.1	0.5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7.5	1.7
임시 및 일용노무자	12.9	5.4
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5.6	2.0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주	2.0	0.3
개인 경영자	0.4	0.1
법인 경영자	0.0	0.0
피고용자가 없는 자유업자	4.7	0.4
피고용자가 있는 자유업자	3.0	0.0
무 직	12.7	6.0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패널조사를 이용해서 빈곤층의 유형을 살펴보자. 우선 가구주의 고용상태별로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이 <표 2-9>에 제시되어 있

4인인 경우로서 이보다 피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경영자로 분류된다.

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빈곤율은 제2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2001년도 조사에서는 고용상태에 관한 정보를, 2002년도 조사에서는 가구소득에 관한 2001년도의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앞의 [그림 2-1]에서 구한 패널조사의 빈곤율과는 표본도 다르고 추계 결과에도 차이가 있다.

〈표 2-9〉 고용형태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2001년)

(단위 : %)

	전 체	근로자	자영자	무 직
빈곤율	18.8	6.4	14.6	46.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패널조사를 이용해서 구한 2001년도의 고용형태별 빈곤율은 다른 조사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영자(14.6%)의 빈곤율이 근로자(6.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무직가구의 빈곤율도 46.3%로서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년도에 조사된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고용형태별 빈곤율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제4절의 <표 2-5>에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고용형태별 빈곤율이 제시되어 있지만, 국가개입 후의 자영자 가구의 빈곤율이 근로자 가구에 비해 50% 높을 뿐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무직가구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30% 초반으로서 패널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2001년도의 조사결과가 이전 년도에 비해서 소득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어떤 결과가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넘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원 전체의 취업상태 및 근로능력, 근로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빈곤층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자. 이 결과는 <표 2-10>과 같다.

우선 빈곤가구내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취업가구)와 취업자가 없는 가구(무업가구)를 나누어 본 결과 취업자가 한 명도 없는 무업가구가

전체 절대빈곤가구의 51.4%를 차지한다. 취업가구는 48.6%이다. 무업가구를 다시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가구, 근로능력자는 있지만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가구,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가구로 구분하였다. 비근로능력자는 조사에서 장애나 건강 문제, 나이가 많아서 근로하기 어려워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경우는 가사나 육아, 학업이나 훈련과 관련된 이유로 비경제활동인 경우이다.

〈표 2-10〉 빈곤층의 유형 구분(2001년)

(단위 : %)

구분		비중
무 업 가 구	가구원 전체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23.1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나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가구	10.3
	근로할 수 있으나 취업자가 없는 가구	18.0
	소계	51.4
취 업 가 구	가구주는 무직이지만 취업자가 있는 가구	12.3
	가구주만 취업자인 가구	20.9
	가구주가 취업이고 가구원 가운데 취업자가 있는 가구	15.4
	소계	48.6

주 : 빈곤가구(735가구) 가운데 가구원 모두의 경제활동상태가 파악되는 719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원자료.

위의 세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가구로서 전체 빈곤가구의 23.1%에 이른다.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0.3%, 근로할 수 있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18.0%이다.

취업가구는 가구주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주가 아니라 가구원만 취업해 있는 경우, 가구주만 취업해 있는 경우, 가구주와 가구원이 모두 취업해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세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가구주만 취업한 경우로 전체 빈곤가구의 21.4%이다.

무업 가구 가운데 가구원 전체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나, 근로할 수 없는 여건이 아닌 가구는 ‘근로무능력 가구’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빈곤층의 유형은 ‘근로무능력 가구’, ‘무업가구’, ‘취업가구’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빈곤가구의 유형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유형에 따라서 이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가구에는 생계급여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가구에게는 특성별로 보육이나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업이 끝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근로할 수 있지만 일하지 않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 집단도 특성에 따라서 노동 시장에서 취업을 촉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정책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취업자가 있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이 더 나은 취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정책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의 강화와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같은 정책들이 이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패키지를 이루어서 확산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²³⁾

위의 <표 2-10>의 수치만으로는 어떤 정책이 얼마나 필요할 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빈곤가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정책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도 빈곤층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제7절 소 결

23) 근로연계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황덕순외(2002) 참조. 한편 EITC의 경우 이전의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제도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절대빈곤율을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서로 다른 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빈곤 관련 연구들을 참고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자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각 절의 주요 결과와 그로부터 얻은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절대빈곤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다. 절대빈곤은 그 자체가 갖는 학술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공부조 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 보호하기 때문이다.

제2절에서는 절대빈곤율의 추계와 관련된 논점들을 여러 선행연구들과 같이 검토하였다.

우선 첫 번째는 절대빈곤의 기준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소득을 절대빈곤의 기준으로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공공부조 수급자의 선정 기준으로 소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소비지출을 이용한 빈곤율도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소득기준이 사용되었으며, 연구목적에 따라서도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소득기준은 이전소득이나 국가의 개입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소득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가구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부표 2-1 참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빈곤관련 연구 및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특성과 이들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제3절에서는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절대빈곤율을 추계하였다.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지출과 총지

출을 이용한 빈곤율을 추계하였고, 이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다.

우선 절대빈곤율은 조사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시기별로 다른 조사와의 빈곤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로 소비지출 기준 빈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주거비를 제외한 빈곤율과 주거비를 포함한 빈곤율 사이에는 괴리가 크고, 주거비를 제외한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현재의 최저생계비에 주거비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제도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분리하는 방안이 타당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총지출 빈곤율에 대한 분석에서도 소비지출 기준 빈곤율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제4절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국가의 개입이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가구주의 고용상태로 분류한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에는 빈곤율 감소효과가 14.5%에 이르지만, 근로자가구나 자영자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다른 결과인데, 선행연구에서는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에도 기인하지만, 표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계층의 보호를 위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절에서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행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빈곤층의 경우에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의 지출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고, 교육비 지출이 낮아서 세대간의 빈곤

의 재생산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와 의료급여의 현실화, 공교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제6절에서는 빈곤가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가구규모에 따라 4인가구를 기준으로 규모가 작아지거나 클수록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점, 취업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라 빈곤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여성 가구주의 경우 빈곤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고용과 빈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근로자가구 내에서도 사무관리직에 비해 생산직의 빈곤율이 높고, 특히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경우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고용형태별 빈곤율 격차가 2003년도에 더 확대되어 근로자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영자 내부에서도 빈곤율에 차이가 있는데, 피용자가 없는 영세자영자의 경우 빈곤율이 자영자 가운데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매우 높고, 최근에는 기능공이나 상용노무자보다 더 높아졌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확대된 자영자의 비중이 최근 계속 낮아져서 2003년도에 34.9%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 규모의 축소가 눈에 띄는데 자영부문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그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취업유무 및 가구원의 근로능력,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기준으로 가구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로부터 가구 내에 취업자가 없는 무업가구와 취업자가 있는 취업가구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 무업가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취업가구에서는 가구주만 취업한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구분을 통해서

가구유형별로 특성화된 대책이 필요하며, 각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책대상자의 엄밀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정책, 취업해 있는 빈곤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 최저임금제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빈곤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했지만, 이외에도 심층적인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조사들이 그 예이다. 또한 빈곤율 추계 및 빈곤층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빈곤의 결정요인,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등 심층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각 주제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발굴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부록 1

1. 균등화 지수의 차이와 절대빈곤율

여기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얻어진 가구균등화지수와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이용한 균등화 지수를 이용할 때 빈곤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부표 2-1>에는 두 균등화지수가 가구규모별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비교의 편의상 4인 가구를 1로 놓고 균등화지수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이용할 경우 최저생계비 균등화지수에 비해 4인 가구보다 적은 가구는 균등화지수가 더 크고, 4인가구보다 큰 가구는 균등화지수가 더 낮아진다. 이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이용할 경우에, 단신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지출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이후에 증가하는 가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출은 낮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표 2-1> 가구균등화지수 비교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10
최저생계비의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1.426	1.571	1.711	1.847
가구원수 ^{0.5} 기준 균등화지수	0.500	0.707	0.866	1.000	1.118	1.225	1.323	1.414	1.500	1.581

<부표 2-2>에는 두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절대빈곤율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해서 추계한 결과를 비교해 놓았다. 2000년의 경우에는 두 균등화지수를 이용한 빈곤율 및 해당 가구에 큰 차이가 없으나, 1996년도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이용해서 구한 빈곤가구의 4.6%는 비 빈곤가구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어떤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

하는가에 따라서 빈곤율의 추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의 보호를 받는 가구의 선정기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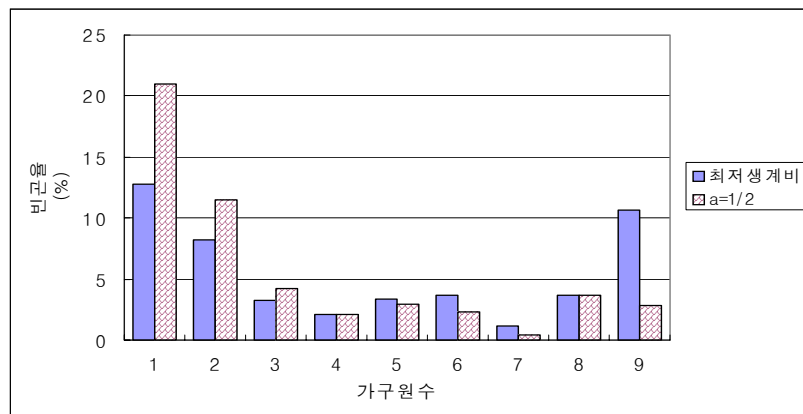
〈부표 2-2〉 가구균등화지수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1996, 2000년)

		1996		2000	
균등화 지수 구분		최저생계비의 가구균등화지수		최저생계비의 가구균등화지수	
	가구구분	일반가구	빈곤가구	일반가구	빈곤가구
가구원수 ⁰⁵ 기준 균등화지수	일반가구	99.1	4.6	98.4	1.5
	빈곤가구	0.9	95.4	1.7	98.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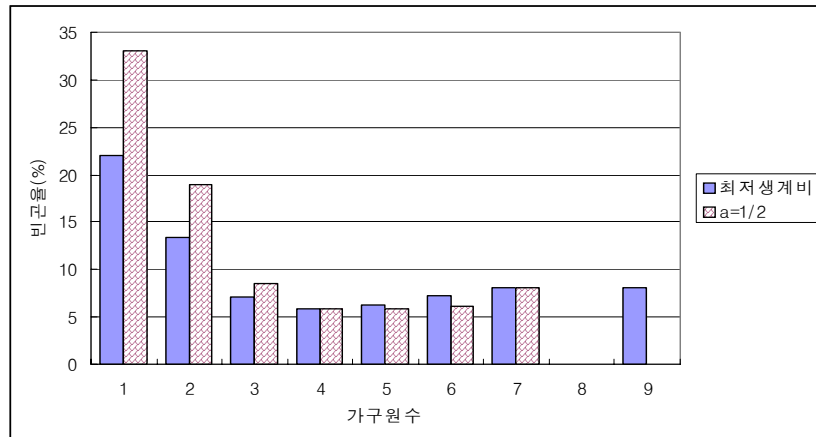
특히 이러한 차이는 가구규모별 빈곤율을 살펴볼 경우에 더욱 커진다. 균등화지수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두 균등화지수에 따른 가구원수별 빈곤율은 [부록 그림 1] 및 [부록 그림 2]와 같다.

(부록 그림 2-1) 가구균등화지수·가구원수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1996년)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도 원자료.

(부록 그림 2-2) 가구균등화지수·가구원수별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2000년)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는 적절한 균등화지수의 선택이 학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하는 주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가구기준 빈곤율과 인구기준 빈곤율

가구기준 빈곤율과 인구기준 빈곤율의 차이는 일반가구와 빈곤가구의 가구규모별 분포의 차이를 반영하게 된다.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두 기준을 적용한 빈곤율을 추계한 결과는 <부표 2-3>과 같다. 이에 따르면 두 기준 빈곤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같거나 0.1~0.2%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두 기준 빈곤율에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평균가구원수가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평균가구원수의 추이는 <부표 2-4>와 같다. 이에 따르면 평균가구규모는 계속 조금씩 낮아지는데, 빈곤가구의 경우 1996년 3.8명에서 2003년 3.5명으로, 일반가구는 1996년 3.6명에서 2003년 3.5명으로 낮아진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도시가계조사가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표 2-4>가 전체적인 평균가구규모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부표 2-3〉 가구기준과 인구기준 빈곤율 추이(경상소득 기준, 1996~2003년)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가구기준	4.9	4.5	8.8	8.1	6.4	5.2	4.1	5.0
인구기준	5.1	4.6	8.9	8.2	6.4	5.3	4.2	4.9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부표 2-4〉 경상소득기준 가구유형별 평균가구원수 추이(1996~2003년)
(단위 : 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빈곤가구	3.8	3.7	3.7	3.6	3.6	3.5	3.5	3.5
일반가구	3.6	3.6	3.6	3.6	3.5	3.5	3.5	3.5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참고문헌

-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김교성(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한국사회복지학회, pp.113-149.
- 김대일(2004), 『빈곤의 정의와 규모』, 유경준·심상달 편,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김미곤·여유진·양시현·강성호·김태완·이강민(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능후(2004), 『빈곤률 추정의 쟁점과 대안』,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의 낙후성, 그 원인과 대책』, pp. 255-266.
- 박찬용·김진욱·김태완(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명재·박형수·전병목(2004), 『조세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홍경준(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한국사회복지학회, pp.61-85.
- 황덕순(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한국노동연구원.
- 황덕순(2001), 『도시취업자의 세대간 직업이동과 세대내 이동』,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pp. 35-62.
- Antolin, P., T. T. Dang and H. Oxley(1999), "Poverty Dynamics in

Four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212

Atkinson, A. B.(1998), *Poverty in Europe*, Blackwell.

Ruggles, P.(1990), *Drawing the Line: Alternative Poverty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The Urban
Institute Press.